

민주 '세수핑크' 30조원에 "尹 대국민 사과해야"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에 "추가경정예산 편성 의무화 재정 청문회도 추진하겠다" 최상목 "추세 오차... 책임감"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올해 세수 결손 규모가 약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세수결손이 발생할 경우, 정

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의무화하는 입법은 물론 재정 청문회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정부의 세수결손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진보·보수 정부를 통틀어 보아도 윤 정부처럼 30조원 이상 세수가 부족한 사례는 없었다"며 "윤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최고·최종 책임자로서 재정·경제정책 실패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책위는 "막대한 세수결손으로 중앙정

부는 물론 지방정부와 교육청까지 재정사업에 큰 차질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책임 있는 정부라면 구차한 변명이 아니라 정부의 재정·경제정책의 실패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개선 방안으로 △세수결손 발생 예상 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의무화 △세수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금) 불응당해년도 발생 금지 제도와 △정부예산안의 국회

제출 후 국세수입 변동 예상 시 국회서 국세수입안 수정 등을 제시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367조3000억원 대비 29조6000억원 부족한 337조7000억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4000억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한 데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핑크'가 현실화했다.

이와 관련,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세수추계 오차가 4년 연속 나왔기 때문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완벽하게 관련 기관과 (논의)해서 지금까지 했던 세수추계 방법을 변화시키려고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 세수에 대해 "올해 법인세와 관련해서 기업들 실적이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 실적은 나와 있다"며 "내년 세수추계와 관련된 부분들의 불확실성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김원이 "지역 중기 연구개발 국비 절반 넘게 '썩뚝'"

중소벤처기업부가 광주와 전남 등 지방의 유망 중소기업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지역특화 산업육성' 사업이 전년 대비 국비 예산이 절반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목포·사진)이 중기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해마다 1000억원이 넘는 중기부의 지역특화 산업육성(R&D) 국비 예산은 올해 절반 이상 줄어들어 517억1700만원에 489개 기업을 지원하는데 그쳤다.

광주는 지난해 85억 5700만원 국비를 지원받아 64개 기업이 49개 과제를 수행



했다. 하지만 올해는 39억6800만원으로 대폭 줄어 참여 기업이 절반 가량 줄어든 36개로 크게 감소했다.

전남 역시 전년 85억 5600만원의 국비가 지원돼 64개 기업이 53개의 과제를 수행했지만, 올해는 국비가 37억73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김 의원은 "자금과 인력, 인프라 등이 열악한 지방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이 더욱 위축될 것"이라며 "예산을 예년 수준으로 되살리고 장기 투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정진욱, 반도체산업·기업 경쟁력 강화 2법 발의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갑·사진)은 26일 "국내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에 '반도체산업혁신특구'의 지정 근거를 마련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했다. 이날 함께 대표발의한 '기업의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은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유인·소개·알선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 △영업비밀 침해를 유인·소개·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 조항을 담았다. **서울=김선욱 기자**

특별법은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반도체 경쟁력강화위원회'를 두고, '반도체산업 혁신특구'를 지정해 반도체 생태계 조성 및 국내외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기술 개발과 설계·제조·공급의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했다.

전진숙 "올해 일반의 개원, 10곳 중 8곳 피부과"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을·사진)은 26일 "올해 7월까지 일반의가 신규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중 약 80%가 피부과를 진료하겠다고 신고했다"며 "수도권과 서울 강남 솔림 현상이 뚜렷했다"고 밝혔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129개소이며, 이 중 80.6% (104개)는 피부과를 진료하겠다고 신고했다.

전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일반의가 새로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500개소였다. 올해 일반의가 신규개설한

최근 3년간 통계도 피부과가 401개(23.7%)로 가장 많았고, 소아청소년과는 2022년 32개에서 올해 22개로, 산부인과도 2022년 13개에서 올해 6개로 큰폭 감소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안도걸 "수의사 사업소득 증가율 전문직 1위"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사진)은 26일 전문직 종사자 중 수의사의 연평균 사업소득이 매년 12.6%씩,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량 증가했다. 반려동물과 함께사는 가구의 증가세와 맞물리며 의료 수요 또한 증가한 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4년~2022년 귀속 전문직 종사자 업종별 사업소득 현황'에 따르면, 의사 평균 소득이 4억원, 중위소득이 2억7000만원으로 주요 전문직 중 소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전문직 중 평균 소득은 의사(4억), 회계사(2억2000만), 세무사(1억2000만), 치과의사(1억), 수의사(1억), 한의사(1억) 등 순으로 높았다. 안 의원은 "평균 사업소득은 1900만원 수준인데 비해, 10대 전문직중의 평균 사업소득은 1억9600만원으로 소득격차를 보였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수의사의 연평균 사업소득은 매년 12.6%씩 올랐다. 지난 2014년 3145만원에서 2022년 8116만원으로 5000만원 가



與 추천 인권위원 선출안 부결 논의 우원식(오른쪽) 국회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한석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이 부결된 뒤 여당의 항의가 이어지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불러 논의하고 있다. **뉴시스**

尹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 2027년 AI 'G3' 도약"

국가인공지능 위원회 출범 "산업·사회 AI 대전환 촉진"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민관 합작 투자로 '국가 AI컴퓨팅 센터'를 구축, 산업 전반의 AI전환을 촉진해 2027년까지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하는 국가총력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광화문 한 호텔에서 열린 대통령직속 '국가인공지능(AI)위원회' 출범식에서 위원장으로서 첫 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AI 분야에서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원대한 비전과 함께 이를 이루어 나가기 위한 국가 총력전을 선포한다"며 "국가적 핵심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민관 협력의 구심점"이라고 국가AI위원회 출범을 알렸다.

윤 대통령은 "8년 전 이곳에서 개최된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 알파고가 세기의 대국은 인공지능시대의 시작을 알렸고, 그로부터 8년이 지난 지금 AI는 명실상부한 게임 체인저가 됐다"며 "AI가 국가역량과 성장을 좌우하고 경제 안보의 핵심이 되는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I반도체 이니셔티브 추진 △한미정상회담 계기의한미 AI워킹그룹 운영 △한미 공동 연구 개발 '글로벌 AI 프론티어 랩' △AI 서울정상회의 개최 및 서울 선언 등 글로벌 AI시장 패권을 쥐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AI컴퓨팅센터"를 민관 합작 투자로 구축했다"며 "앞으로 이 센터가 인공지능 연구 개발과 산업 육성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산업과 사회 전반의 AI 전환을 촉진하고 민간의 AI 투자를 확대

시키겠다"며 "또 저작권과 개인정보보호 규제, 보호받는 핵심 가치는 지키되 이것이 AI 혁신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규제를 전향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연구개발과 인프라는 물론이거니와 교육 법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치밀한 전략을 세우고 철저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관이 함께 노력해 세계 최강의 IT강국이 된 대한민국은 이제 정보화혁명을 이뤘던 DNA로 다시 한번 민관이 합심해 AI 3대 강국이 되고, 우리 국민들과 전세계인이 AI혁신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AI위원회는 AI전문가 민간위원 30명과 주요 부처 장관급 정부위원,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국가안보실 3차장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기구다.

서울=김선욱 기자

서삼석 "구조 개선으로 지방소멸·기후위기 해소해야"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영암·무안·신안·사진)은 "지방 소멸 및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큰 틀의 구조 개선 및 혁신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지방소멸·기후위기 농업혁신포럼' 출범식에서 "포럼은 제 22대 국회의 처음이

자 마지막인 농민·농업·농촌을 위한 몸부림"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서 의원은 위성곤 의원과 함께 포럼의 대표 의원을 맡았다.

원내 4개 정당 국회의원 21명이 참여했다.

포럼은 기후위기 대비 농업·농어촌의



혁신 방안과 법안을 마련하고, 농어촌지역의 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자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또 지방소멸 대응과 농업·농촌을 위한 농어민 연금 도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연구에도 나선다.

서울=김선욱 기자